

행정학

해설위원: 김 덕 관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②	②	④	③	④	②	④	①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③	②	④	③	②	③	④	①

▶ 출제영역 분포

단원	문제수	단원	문제수
행정학총론	1	재무이론	3
정책이론	5	행정환류	1
조직이론	3	전자정부론	-
인사이론	3	지방자치론	3

▶ 문제분류 및 실력진단기준

기출문제	15	생소한 문제	3	100점 방지	2
------	----	--------	---	---------	---



실질적인 만점: 90점
 고득점: 85점 이상
 분발대상: 70점 이하

총평

작년부터 국가직 7급에서는 9급하고 난이도 차이를 두려는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난이도 조절이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생소한 개념을 섞는 수준입니다. 15문제는 기출문제집에 추려 놓은 문제의 출제포인트와 OX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었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평소에 못 보던 생소한 개념이 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기본서로 범위를 넓히면 생소한 개념이 줄어들지만, 현실적으로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기출문제집에 있는 “대비가능한” 문제를 모두 맞았다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75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고 공부했던 “알고 있는” 개념으로 소거하여 풀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고르는 문제를 맞았다면 80점이 되고, 나머지 4문제에서 4지선다의 4분의1 확률만 적용해도 85점이 됩니다. 이번 국가직 7급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행정학에서 맞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고득점은 85점입니다. 지금은 남들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합격생이 나오면 행정학 점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만큼 솔직하게 수험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85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은 행정학에서 받을 점수 다 받았으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절대 처음 보는 생소한 개념 때문에 ‘멘붕’에 빠져서 행정학 공부 범위를 넓히지 말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에 공부범위를 대폭 넓혀 버리면 다음 시험 점수 떨어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험에 안 나오던 것까지 다 준비하면 매년 나오던 주제에 소홀해져 틀려 버리고 정작 범위를 대폭 넓혀 생소한 것까지 공부한 것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점수 떨어집니다.

이제 문제는 75점 미만의 점수가 나온 분들입니다. 이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 중 못 맞춘 것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비가능한” 문제에서 틀린 것입니다. 대비가능한 문제에서 틀렸다는 것은 공부방법의 문제입니다. ‘행정학’이라는 난해하고 방대한 학문에서 그만 허우적거리고, ‘공무원 시험 행정학에서 시험에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기출문제로 확인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왔던 것이 또 나온 것도 맞추고, 출제포인트와 출제패턴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출제가능한 것을 예측하여 기본서에서 해당 부분만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공부범위도 무한정 넓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같은 시간 공부한다고 가정할 때 점수로 연결되는 가성비가 훨씬 좋아집니다. 행정학 한 과목만 공부하고 우리의 시간이 날아들면 저도 이렇게 조연하지 않겠지만,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해도 과목 수는 많고 우리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제 그만 “모든” 것을 공부하여 “모든” 문제를 대비한다는 이상론에서 벗어나고, “현실적으로 합격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덕관 유튜브 채널: 공대란장
 김덕관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

▶ 문제 및 해설

문 1. 행태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 ②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 ③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 암기용 해설

②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 행태론: 가치와 사실의 분리 ⇨ 사실만 연구

◀ 이해용 해설

① (○), ② (×) 행태론은 논리실증주의 연구방법에 따라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여 증명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과 같은 증명하기 어려운 가치는 연구대상에서 배제한다.
 ③ (○), ④ (○) 행태론은 모든 인간의 행태는 규칙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집단을 이룬다고 해서 개인의 행태와 다른 특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따라 개인의 행태를 연구하면 보편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

◀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53번

(2010 전환특제) 다음 중 행태주의의 특징이나 주장 중 옳지 않은 것은?
 -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여 사실중심으로 행태현상을 연구한다. (○)

문 2.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②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 ③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하였다.
- ④ 엘리트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암기용 해설

②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 신엘리트론: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론

◀ 이해용 해설

① (○), ② (×) 신엘리트론은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엘리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를 차단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밀즈의 지위접근법과 헌터의 명성접근법은 고전적 엘리트론에 해당한다.
 ③ (○) 신엘리트론은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의사결정과 무의사결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다원주의가 의사결정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엘리트의 무의사결정을 통한 권력행사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403번

(2007 경남7급) 다음 중 엘리트이론의 정책모형과 가장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것은?
 - 신엘리트이론이라 할 수 있는 Bachrach와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은 이익집단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

<암가용 해설>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 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결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 총액인건비제도: 예산총액 범위에서 기구·정원·보수·예산의 자율성 부여

<이해용 해설>

① (○) 직업공무원제도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전문직업분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직업공무원제는 다양한 업무를 두루 수행하는 일반 행정가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은 약한 편이다.
② (○) 업관주의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치지도자가 행정관료의 임용권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정치지도자의 정책을 행정관료를 통해 실현시키기 용이하므로 이 점에서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④ (×) 총액인건비제도는 부서별 예산총액의 범위 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및 예산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제도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125번

(2011 국가9급)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및 예산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

문 11. 지방재정의 구성 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
- ②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 ③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조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합성 유지

<암가용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
▶ 의존재원: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 ⇒ 지방분권에 부적합

<이해용 해설>

① (×) 의존재원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부적합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관여할 소지를 주게 된다.
② (○), ③ (○) 중앙정부는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방정부에 의존재원을 지원하여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④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국가전체적인 업무를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의존재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국가전체적인 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도록 유도·조정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907번

(2007 경북9급, 2005 경북9급, 2001 국가7급) 지방교부세의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915번

(2009 군무원7급)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
- 지역의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무가 없고,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

문 12.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 | |
|-----------|---------|
| ㄱ. 취득세 | ㄴ. 자동차세 |
| ㄷ. 종합부동산세 | ㄹ. 인지세 |
| ㅁ. 등록면허세 | ㅂ. 주세 |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ㄷ, ㅁ
- ④ ㄹ, ㅂ

<Tip>

지방세로 암기한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를 소거하여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국세는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암가용 해설>

ㄱ. 취득세, ㄴ. 자동차세, ㅁ. 등록면허세
▶ 지방세

<이해용 해설>

ㄱ (×), ㄴ (×), ㅁ (×)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다. 지방세에는 보통

세인 지방소득세, 취득세, 레저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와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이것들 외에는 모두 국세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894번

(2006 국가9급) 다음 <보기>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만을 모두 골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ㄱ. 취득세 (○), ㄴ. 등록면허세 (○), ㄷ. 자동차세 (○), ㄹ. 재산세 (○)

문 13.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가?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①	90일	40일	30일
②	90일	50일	30일
③	120일	50일	40일
④	120일	50일	30일

<암가용 해설>

③ 예산안 제출기한: 중앙정부-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광역자치단체-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해용 해설>

③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14.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 ② 칼도- Hicks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 ③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 ④ 재화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측정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암가용 해설>

② 칼도- Hicks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 칼도- Hicks기준의 한계: 손실을 보는 집단을 위한 재분배 논의가 없음

<이해용 해설>

② (×) 칼도- Hicks기준이란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증가하면 효율성이 증가했다고 보는 효율성 판단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어떤 집단의 편익 증가 정도가 다른 집단의 손실 증가 정도보다 크면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가했다고 보지만, 이 경우 손실을 보는 집단을 위한 재분배 논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516번

(2010 경정승진)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과 가장 가까운 것은?
㉠ "칼도어- Hicks(Kaldor-Hicks)"는 어떠한 변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보다 이득을 많이 가져올 경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면서 파레토 최적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문 15.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윤리법」상 취임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임제한기관에 취임할 수 없다.
- ②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④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암가용 해설>

④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우리나라의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이해용 해설>

④ (X) 우리나라의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325번

(2016 국가9급)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

문 16.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②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 ④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ip>

선지 ③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인데, 이러한 법률까지 찾아보면 행정학 공부범위가 밀도 끝도 없이 늘어나서 점수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선지 ①, ②, ④를 공부해 두면 됩니다.

<암가용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방채 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②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지방채의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 가능**
④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채발행: 지방의회 의결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필요**

<이해용 해설>

① (X)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X) 지방채는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④ (X)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넘는 경우와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17.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 ②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 ③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 ④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암가용 해설>

②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 **참여예산제도: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이해용 해설>

① (○), ② (X) 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결과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하는 제도이다. 세부 단계로는 예산편성 과정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521번

(2013 국가9급)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정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

문 18. 정부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 ③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Tip>

지방자치제도의 성격을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할 때 영국과 미국은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개별적으로 위임한 사무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가용 해설>

①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 **미국 건국초기: 연방의 권한이 약함 ⇨ 주의 권한이 독립적**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 **딜런의 규칙: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 ⇨ 위임된 권한만 가짐**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은 **어려워져서 못했다**.
▶ **일본: 현재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해용 해설>

① (X) 미국 건국초기에는 아직 연방정부가 발전하지 못하여 주정부에 비해 권한이 약했으며, 개별적인 주의 권한은 연방으로부터 독립적이었다.
② (X) 딜런의 규칙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만 처리해야 한다.
③ (○) 지방자치제도의 성격을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할 때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한 영국은 개별적 지정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위임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④ (X) 현재 일본은 중앙집권적 체제를 완화시키고 지방자치제도를 시행 중이다.

문 19. 민원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체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④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Tip>

행정학 문제가 아니라 행정법 문제입니다. 7급 일반행정직 수험생들은 행정법 과목도 있으니 행정법 과목에서 배운 내용으로 다 맞추셨죠? 행정법 공부 안 하시는 분은 참고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암가용 해설>

④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 **행정기관도 사경제 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음(민원제기도 가능)**

<이해용 해설>

④ (X) 행정기관도 사경제 주체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른 행정기관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 20.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 ③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Tip>

국세감면율이란 '국세로 받았어야 하는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이겠죠? 국세 수입총액은 받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수입이니 당연히 틀렸습니다. 행정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시험장에서는 아무 생각이 안 나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긴 합니다. 생소한 개념이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꼭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소거하거나 알고 있는 개념으로 유추하여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암기용 해설>

- ①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 국세감면율: 국세 수입총액 + 국세감면액 대비 국세감면액

<이해용 해설>

- ① (X) 국세감면율이란 국세로 받았어야 하는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이다. 즉,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679번

(2001 행정고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365번

(2017 서울7급, 2014 경찰간부) 다음 중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아닌 것은?

- 국가보증채무부담시 국회의 사후승인 의무화 (X)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546번

(2013 행정사)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